

##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소득 불평등, 가계부채, 소비, 그리고 경제위기의 관계

2013.02.28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
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요 약 문

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 현대 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 동력이 다시 회복되면 불평등 문제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거나, 단기적 민생대책 차원에서 다중 채무자 가계부채를 일부 해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려가 없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처럼 소득 불평등에서 뚜렷한 악화 움직임을 시작되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 소득 불평등의 악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별 소득 격차나 소득 계층별 격차 확대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역시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간 동안에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지출 수준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던 하위 10% 계층도 소비지출은 완만하게나마 계속 늘어났고, 5분위의 중간 계층은 오히려 상위 10% 계층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빨랐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부채를 통해 소비수준을 유지’ 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국내 수요 정체 상황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다. 부채 주도(금융 주도) 성장 모델과 수출 주도 모델이 그것이다. 부채 주도형 성장은 소득 정체로 위축된 소비 수요를 부채로 매우는 것이고, 수출 주도형 성장은 똑같이 위축된 소비 수요 상황을 수출로 타개하는 것이다.

한국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주도 성장의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 우선 미국과 영국 못지않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급증과 2000년대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부채주도 경제 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에서 민간 소비에 비해 압도적인 수출 기여도나, 100%가 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다.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인 독일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80%, 50% 내외인 것과 비교해보라. 더욱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는 장기간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념이 확고했다.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 금융시스템으로는 부채 주도형 성장 모델이 불가능했지만, 외환 위기 이후 엄청난 속도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 규제완화가 몰아닥쳤기 때문에 수출 주도 성장 모델 속에서 부채 주도형 특징이 중첩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주도형 모델을 재벌 대기업들이 선도했다면, 부채 주도형 모델은 외국 금융자본이 중심이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십중팔구 제 2의 대공황이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대공황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엄청난 규제 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쏟아 부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규제 금융과 경기 부양책으로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방지했기 때문에, 더 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시급성이 악화되고 말았다.” (Raghuram Rajan, 2010) 절박한 더 큰 난제는 바로 ‘불평등의 심화’였다. 난제의 해결을 미룬 대가는 잠깐의 경제 회복 뒤에 다시 찾아온 위기였고 그 위기는 지금 장기화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다.

“가계 대출 확대야말로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치인들은 믿었다. 가계 대출을 확대하게 되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국민은 자신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가계 대출 확대는 금융 산업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주택 건설 분야의 수익과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보였다.” (Raghuram Rajan, 2010)

보다 균형적인 소득 분배는 안정적 성장체제를 위한 핵심적 전제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유럽위기의 지속에 따른 세계경제 장기침체로 수출주도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는 지금, 한국경제도 여전히 위기의 반경아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노동권 회복은 바로 위기의 예방책이자 안정적 성장의 전제이다.

## 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봄 현재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심화되는 양극화와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가 될 것이다. 이는 10년 전 참여정부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호전되기보다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가 핵심 공약 의제가 되었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반영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의 첫 번째가 가계부채 해결이었다. 가계부채 1000조가 사회 경제 전체의 심각한 부담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 현대 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 동력이 다시 회복되면 불평등 문제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거나, 단기적 민생대책 차원에서 다중 채무자 가계부채를 일부 해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려가 없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2008년 대침체를 초래한 근본원인이며 지금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주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위기 초창기에는 은행 경영자들이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게 하는 과도한 성과 보수 체제나 혁신적 금융기법에 대한 무모한 신뢰,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미시적 요인을 위기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는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가 투기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의 이론에 따라 금융의 규제완화로 증폭된 금융시스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계경제를 돌이켜 볼 때,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두 번의 커다란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과 2007년에 시작된 대침체가 그것이다. 두 번 모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치솟은 뒤에 발생했고, 이때 중·저소득 계층 가구에서의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유사하게 급격히 증가했다.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이르자 위기를 촉발” 했던 역사적 경험을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는 분석이 퍼지기 시작한다.(Michael Kumhof, 2010)

그리고 심화되어가는 소득 불평등과, 중·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 위험 상승 사이에는 내적으로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경제 역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극점에까지 이른 가계부채가 도대체 어떤 구조아래에서 확대 재생산 되었고 어떤 역학이 작용해 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다. 이는 또한 2011년부터 다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정책대안이 필요한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지에 대해 상당한 영감을 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가로 막고 있는 내수 요인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들의 구매력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증가의 관계, 민간소비 변화 양상, 여기에 금융 규제완화가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한 후, 그것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에는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인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적 대응을 벗어나 보다 구조 개혁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높여 접근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 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

최근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왜 소득 불평등 자체가 악화되었는지를 해명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수준 이하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하락하거나 정체했던 점을 핵심 이유로 꼽는다. 주주자본주의가 확립된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 이윤이 주로 거대한 경영자 보수로 돌아가면서 개인별 소득격차(상위 1% 소득 집중도)가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개인 소득 격차보다는 기업 이윤 몫이 커지고 노동자 임금 몫이 줄어드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현상이 두드러졌다.(E. Stockhammer, 2012)

노동자 임금소득 하락은 단지 특정 노동자 그룹의 임금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실업의 증가,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등 불완전 고용 확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을 모두 포괄한다. 노동을 줄여야 할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단기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영행태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 압박의 직접적 결과이며, 사회 안전망 해체의 간접적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가 있다.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 등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거기에는 금융부문의 규제가 완화되고 조직노동과 복지국가를 약화시키는 각종 입법조치들이 포함된다.” (E. Stockhamm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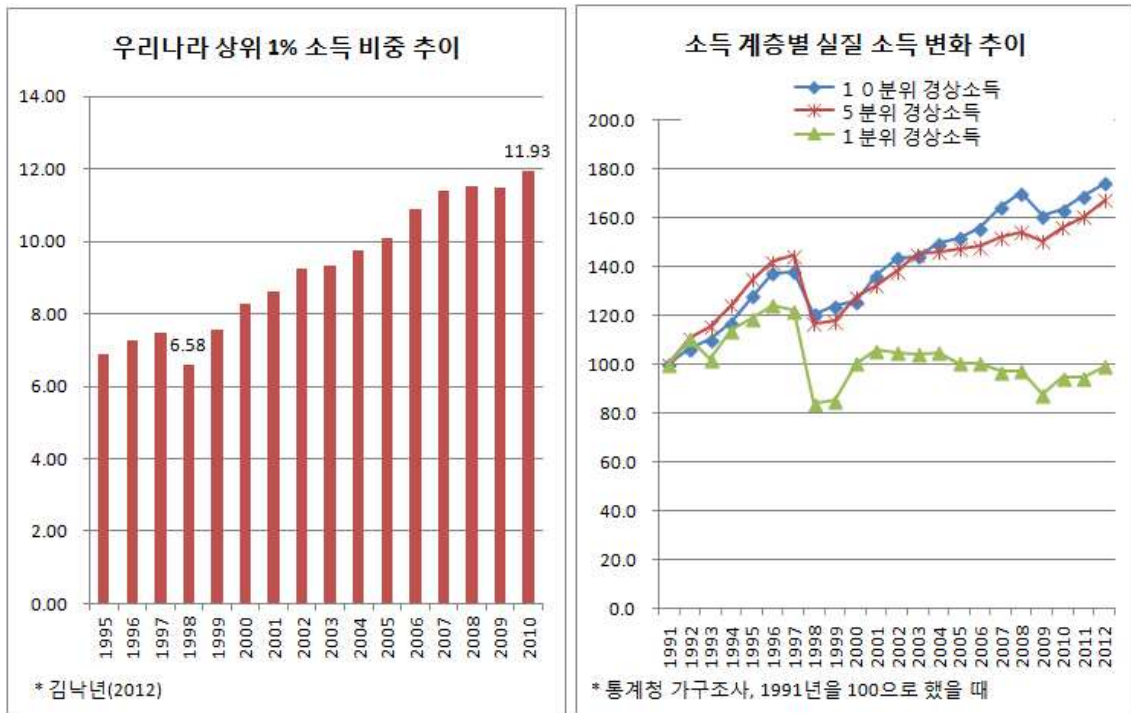
소득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체제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는 것은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했던 시작 시점이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부터였다는 사실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둘 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된 시점이다. 신자유주의 극복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소득 불평등 해소이며, 이를 위해 유연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수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상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한국경제는 1997년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처럼 소득 불평등에서 뚜렷한 악화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악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도 예외 없이 상위 1% 소득이 급증한다. 1998년 6.58%였던 것이 2010년 11.93%까지 12년 동안 소득 집중도가 거의 두 배가 뛰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1% 소득 집중도가 가장 극심했던 미국의 경우 그 비중이 1980년에 10.2%에서 2007년 23.5%까지 두 배 넘게 늘어났는데 그 기간이 거의 30년 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급격한 소득집중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동안 하위 10%의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중간층의 소득 상승률도 완만한 상승 정도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전에 전체 계층에 걸쳐 소득이 동반 성장하던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상위 1% 소득 집중도와 소득 계층별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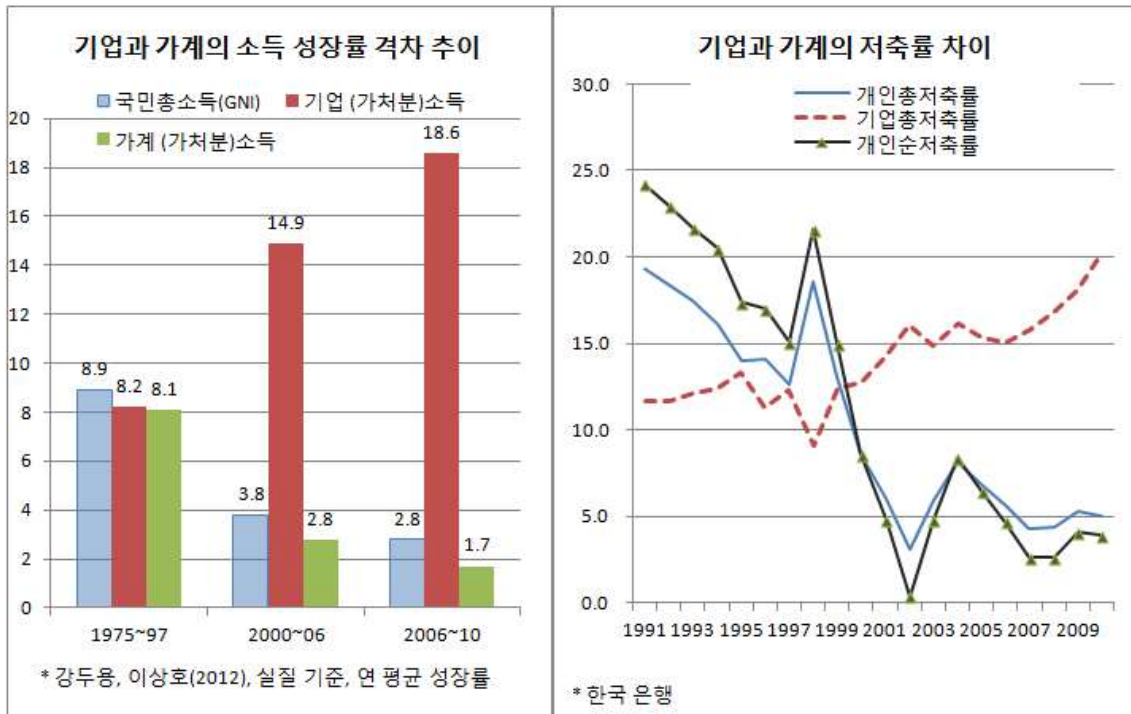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별 소득 격차나 소득 계층별 격차 확대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던 기업 가처분 소득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달라진다. 기업 소득 성장은 폭발적인 반면 가계 소득 성장은 거의 정체 된 것이다.([그림 2] 참조)

왜 이런 격차가 발생했을까. 기업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경쟁력 강화로 부가가치 창출력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일까? 2006~2010년 동안 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5%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기업 소득은 무려 18.6% 폭증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임금 몫의 비중이 줄어들었던 점(노동소득 분배율 저하)이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었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다. 또한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가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자영업 부문의 소득성장이 극히 저조한 것이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강두용, 2012)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 을 중심한 성장 추구의 결과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 확대는 기업에게 거대한 저축을 누적시키고, 반대로 가계에는 부채를 누적시키게 된다.

[그림 2] 한국의 소득 불평등 특징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 확대



세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역시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특정 시점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소득이 상승할 수 있게 되거나 다음 세대에서는 계층 이동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생애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진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도 인생역전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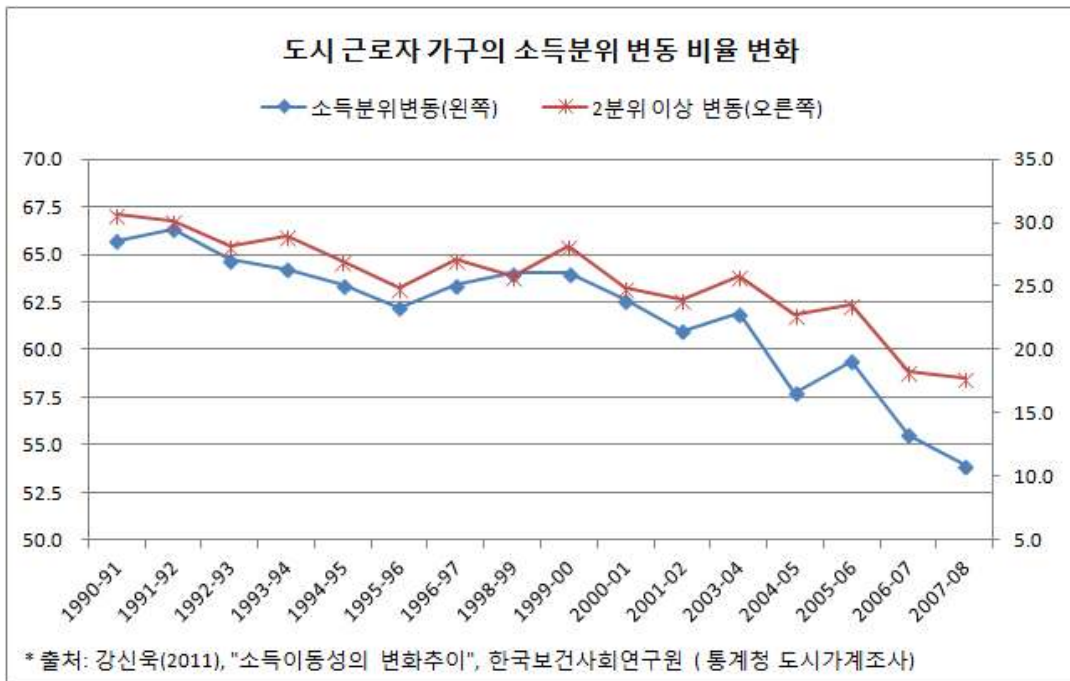
이를 알아보는 지표가 소득 이동성(income mobility)이다. 소득 이동성이 크면 소득 지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동성이 작으면 그 반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소득 이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히 소득지위 하락 정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조사 결과다.([그림 3] 참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생애 주기 동안 소득 지위의 이동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며, 그만큼 불평등은 고착화 된다 것이다.(성명제, 2011, 강신욱 2011)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악화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도입되어 금융 자유화, 노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동시장 유연화가 확산된 시점과 일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상위 1% 소득 집중 속도는 매우 가팔랐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소득 불평등 상태의 고착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소득 이동성(income mobility)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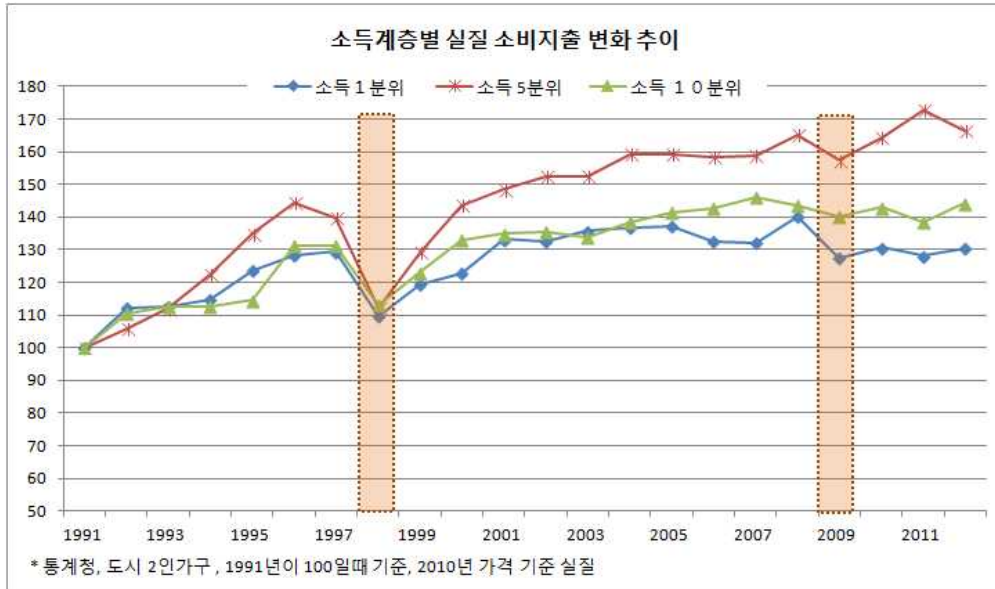
### 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 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노동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며, 기업과 정부는 또 어떤 행동에 들어가게 될까.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가계는 개별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린다거나 맞벌이 등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부족한 임금 소득을 보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또는 소비지출을 줄여서 소득에 맞출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간 동안에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지출 수준은 줄어들지 않았다.(Michael Kumhof, 2010)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그림 4] 참조)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던 하위 10% 계층도 소비지출은 완만하게나마 계속 늘어났고, 5분위의 중간 계층은 오히려 상위 10% 계층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빨랐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부채를 통해 소비수준을 유지’ 했다는 것이다.



[그림 4]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크게 변하지 않은 소비지출 패턴



문제를 좀 더 큰 그림으로 확대하여 소득 불평등 심화가 누적되는 상황을 자초했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확대, 즉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노동의 임금 몫의 하락)은 국내 소비수요를 위축시킨다. 저소득 임금소득자는 고소득자 보다 훨씬 높은 소비성향을 띠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 몫의 하락은 이윤 몫의 상승을 가져와 논리적으로는 주어진 수요 수준에서 투자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임금 몫 하락은 국가의 순 수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모든 나라에서 임금 몫이 하락한다면 효과는 없겠지만.

이처럼 소득 불평등 확대, 즉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가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임금 주도형 국가에서는 내수에서 소비 수요의 위축이 결정적이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불평등 확대는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총 수요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E. Stockhammer, 2012)

신자유주의는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국내 수요 정체 상황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다. 부채 주도(금융 주도) 성장 모델과 수출 주도 모델이 그것이다. 부채 주도형 성장은 소득 정체로 위축된 소비 수요를 부채로 매우는 것이고, 수출 주도형 성장은 똑같이 위축된 소비 수요 상황을 수출로 타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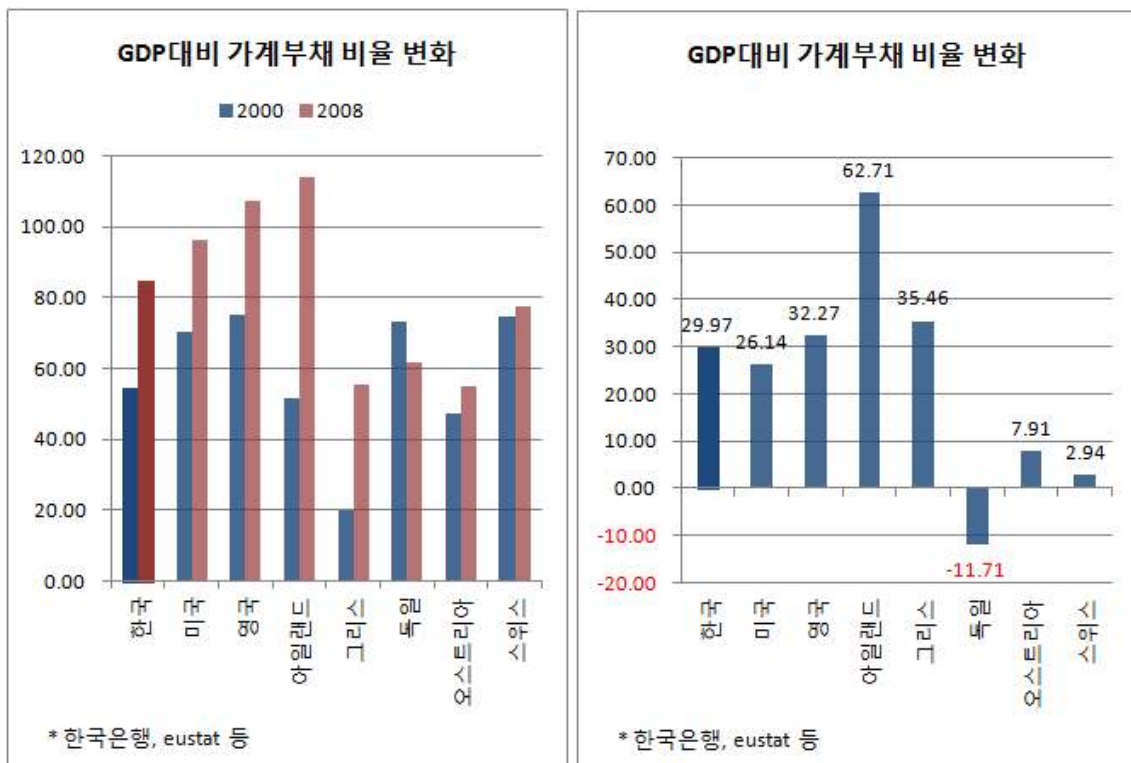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했다. 즉, 국내적으로 고소득 계층의 저축을 흡수하여 중·저소득 계층에게 신용창출을 풍부하게 해줄 금융 시스템의 규제완화가 필요했고, 국제적으로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성과 개방을 확보하여 수출 주도 국가(정상수지 흑자국가)에서 부채 주도국가(일반적으로 정상수지 적자 국가)에게로 자본의 환류가 가능한 여건을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금융 자유화의 지원을 받아 일정 기간까지는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장 시스템이 쌍을 이루면서 신자유주의를 지속시켜왔다. 가계부채의 누적과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그런데 각 국가들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일관된 설명은 어렵다고 한다. 대체로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 주도형 경제 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 핵심국가들에서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산업정책의 차이도 있지만 금융제도 차이가 컸을 것인데, 부채주도형 모델, 또는 금융주도형 모델은 시장 친화적인 금융 환경과 금융제도 혁신 없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유로지역은 거꾸로 되어서 수출 주도형 성장을 독일 같은 중심국가가 추진하고 부채 주도형 성장을 남유럽의 주변국가가 추구하는 양상이 되었다. 유로화 통합으로 인해 남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저금리로 쉽게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부채 주도형 성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고 축적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했고 수출주도형 성장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그림 5] 부채 주도형 국가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가계 부채 비율 변화 추이



이후 부채 주도형 국가들에서는 경제 성장에서 소비 비중이 계속 증가했고, 더불어 가계 부채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대된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반면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소비 비중이 축소되고 가계부채도 거의 오르지 않거나 아예 떨어지게 된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2000~2008년 사이에 독일 가계부채가 11%이상 하락했고 같은 수출 주도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7% 수준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25~30%가량 폭증했고 남유럽에서는 훨씬 심했던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그림 5] 참조) 또한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이전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더 늘었음은 물론이다. 2007년 독일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7.5%였고 반대로 미국은 적자가 5.07%였다. 물론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처럼 무역수지 흑자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증가한 나라들도 드물게 존재한다.(E. Stockhammer, 2012)

### 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국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주도 성장의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 우선 미국과 영국 못지않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급증과 2000년대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부채주도 경제 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에서 민간소비에 비해 압도적인 수출 기여도나 100%가 넘는 무역 의존도를 보면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다.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인 독일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80%, 50% 내외인 것과 비교해보라. 더욱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는 장기간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념이 확고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주변 국가들이 늘어가는 대외채무를 감수하면서 부채 주도형 성장을 한 것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은 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재벌 대기업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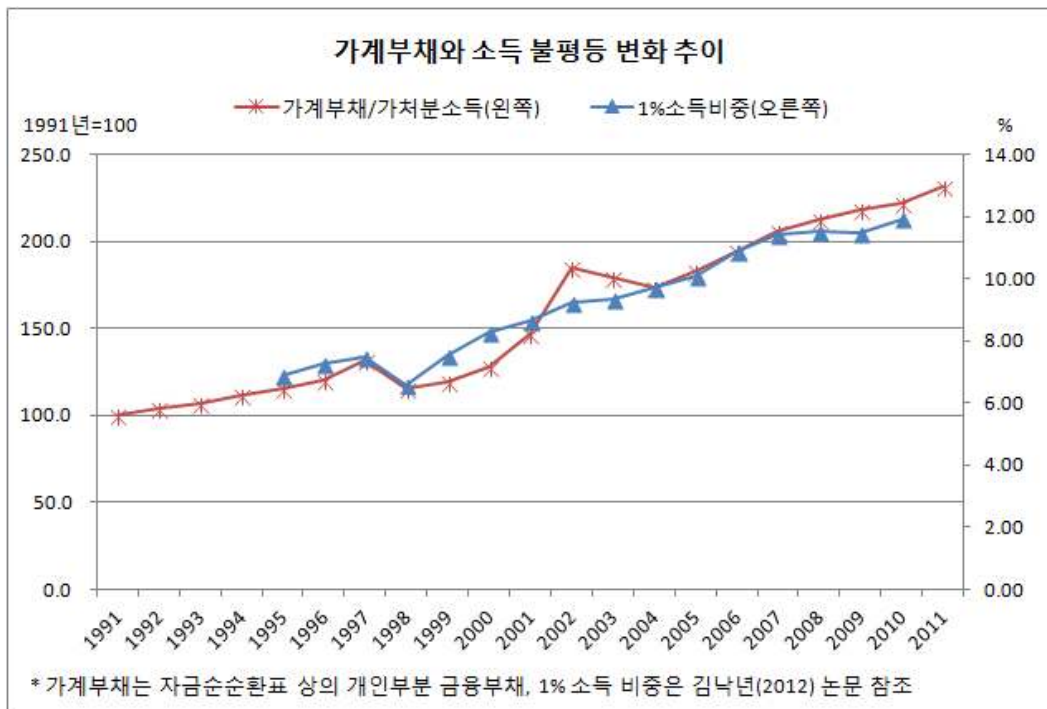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경험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적이라는 지상과제를 남겨주었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변화를 강제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부채주도 성장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즉, 민영화 된 은행들이 수익 추구형으로 전환되면서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린다. 자본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은 신용 팽창을 선도한다.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 금융시스템으로는 부채 주도형 성장 모델이 불가능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엄청난 속도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 규제완화가 몰아닥쳤기 때문에 수출 주도 성장 모델 속에서 부채 주도형 특징이 중첩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주도형 모델을 재벌 대기업들이 선도했다면, 부채 주도형 모델은 외국 금융자본이 중심이 되었다.

한국경제에서 소득 불평등 심화가 어떻게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보자.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와 1% 소득 집중도 증가가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그림 6] 참조)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어떤 경로로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오는지 살펴보자. 우선 한 가지 설명은 계층 간 불평등해진 소득에 대해서 금융시스템이 증대하여 저축과 부채의 형식으로 재분배 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상위 5% 고소득 “투자자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추가적인 금융자산을 구입하면, 그 돈은 노동자에게 대출의 형태로 흘러들어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에 따르는 소비하락을 막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소득대비 부채가 대규모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그것이 점차로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Michael Kumhof, 2010) 한마디로 고소득층 → 금융투자 → 금융기관 팽창 → 대출 증가 → 중·저소득층 가계부채 증가 → 소비 유지의 순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림 6]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1% 소득 집중도 증가 추이 비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대기능을 맡은 금융 산업 부문이 과잉 팽창하게 되고 위기가 발생하면 거대한 규모의 가계부채 상환불능과 갑작스런 생산위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팽창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부채 증가가 과연 저소득 계층에게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부채 자체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고 특히 담보가 가능한 주택 소유 중산층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소득 계층별 부채 규모를 시계열로 파악할 데이터가 없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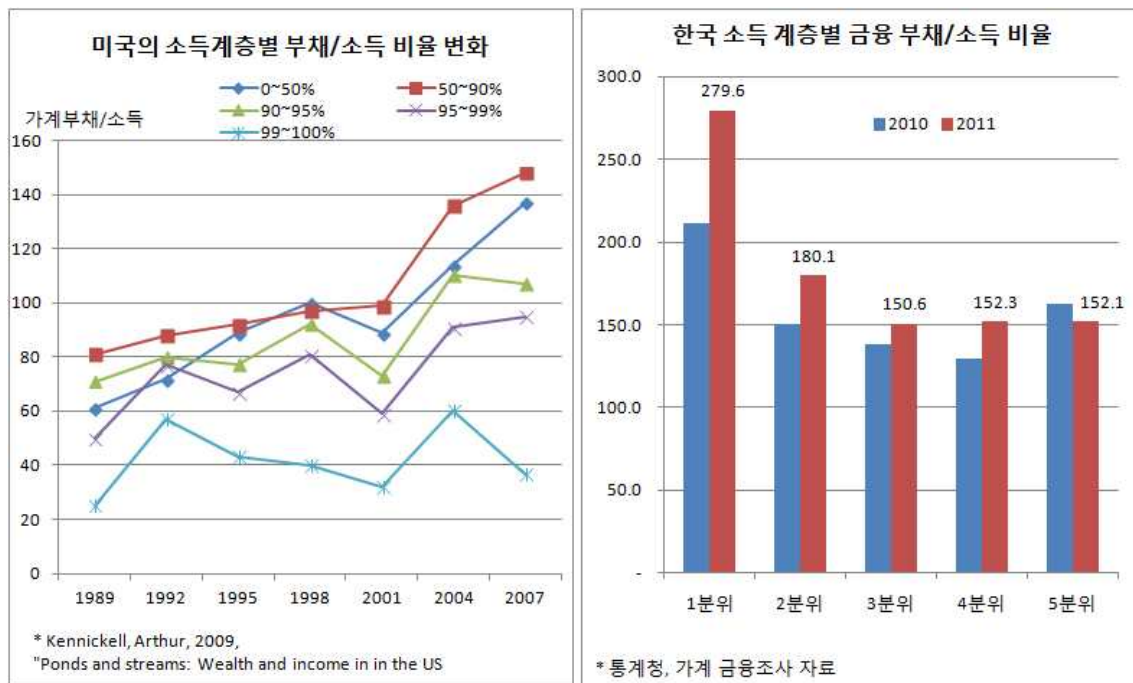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계열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부채 규모 자체는 고소득층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는 소득 불평등 보다 자산 불평등이 큰 상황에서 자산담보의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가치가 오르는 동안에는 이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고 자산 효과를 업고 소비지출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의 절대 규모가 아닌,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최 상위계층 보다 는 저소득, 특히 중위 계층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고, 위기 이전에 주로 이들의 부채가 더 많이 팽창했던 것도 사실이다.([그림 7] 참조)

미국의 금융위기를 2007년도 초창기만 해도 ‘서브 프라임 위기’로 불렀는데, 당시 저소득 계층에게 풀려나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전체 모기지 대출의 최대 20%에 불과했지만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보라. 한국도 2009년 경제침체 이후 주로 중·저소득 계층 쪽에서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게 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그림 7] 미국과 한국에서의 소득 계층별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득이 급팽창한 최상위 계층의 경우 엄청나게 불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단지 은행에 저축하는데 그쳤을까 하는 점이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면 이들은 평이한 저축이 아니라 모험적 투자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부유한 가계들일수록 위험자산 보유가 많다는 것이 그 증거다.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특히 최상위 부유층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헤지펀드들이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을 주도적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은 헤지펀드가 주로 소유했는데, CDO 파생상품의 절반을 헤지펀드가 보유했었다. 결국 거대한 사적 재산 축적' 이 위험 금융자산에 대한 과잉수요, 즉 투기 수요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확대시킨다.(E. Stockhammer, 2012)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이 되었고, 나머지 중·저소득 계층은 부채를 동원하여 이들 고소득층의 투기를 뒤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을 팽창시키고 금융투기를 일으킨 저축이 꼭 국내 최상위 고소득층으로부터만 흘러들어왔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 우선 금융시장 자유화와 세계화의 환경아래에서 자본은 경상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되돌아 간다.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리 차이나 투자 여건 변화에 따라 선진국의 막대한 자본이 신흥국들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수익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주식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붐의 자금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네 번째로, 소득 불평등 심화로 중·저소득 계층이 부채를 동원하여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금융회사들이 이들에게 대출을 확대해온 것은 전적으로 경제 행위자들이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인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 과정이 시장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미국의 중산층 가구들은, “원래 하던 소비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외국으로 가끔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월급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눈치 챘다. 그리하여 정치권이 소득 불평등 심화 대응책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대응책이 주는 소비 증대와 고용 증가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반면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미래로 미룰 수 있다.”

“가계 대출 확대야말로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치인들은 믿었다. 가계 대출을 확대하게 되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국민은 자신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가계 대출 확대는 금융 산업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주택 건설 분야의 수익과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보였다.” (Raghuram Raja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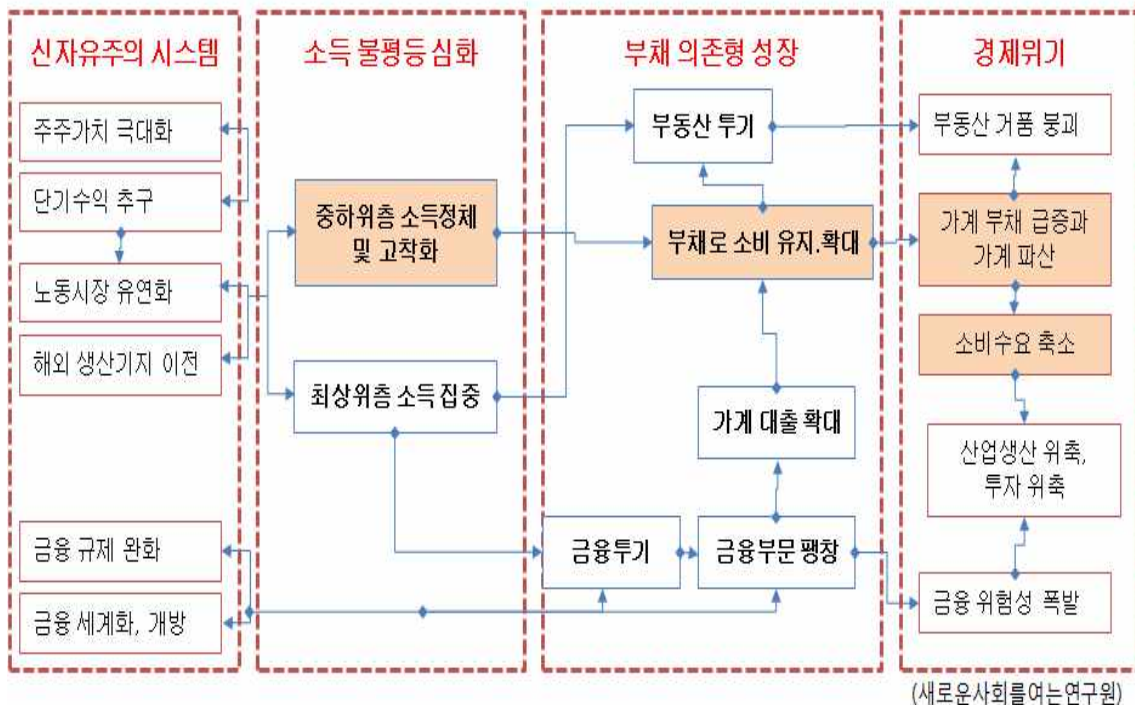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클린턴 정부가 선택한 것이 ‘저소득 계층위한 서민용 주택 건설’이었다. 저소득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집을 살 자금이 있을 턱이 없으니 저소득 계층을 위한 대대적인 대출 규제완화 방안들이 강구되었고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정점에 2000년대 부시행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주택소유사회(Ownership Society)’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소득불평등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거품에 미친 영향은 어떤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지대했다.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가계부채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림 8]과 같은 구조가 된다. 이 그림은 일국적 경제(closed economy) 차원에서의 내적 메커니즘을 구조화 한 것이다. 무역 개방과 해외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효과 등을 따지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최상위층으로 집중된 소득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며, 국내의 금융부문 역시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으로도 팽창할 수 있다. 즉, 개방경제(open economy)를 가정하면 훨씬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채 의존형 성장 구조가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 안에 중첩된 부속 모델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림 8] 소득 불평등과 부채, 소비, 위기의 연결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소득 불평등과 금융규제완화 - 가계부채 증가 - 위기의 연관관계 (일국적 경제 차원)



## 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내부적으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금융자유화와 세계화를 지렛대로 하여 일정기간 부채를 늘려 회피하거나 수출로 우회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가계부채 누적과 금융투기와 거품의 확대, 글로벌 불균형 심화를 초래했고 2008년 대침체로 이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십중팔구 제 2의 대공황이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대공황의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고 엄청난 구제 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쏟아 부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구제 금융과 경기 부양책으로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방지했기 때문에, 더 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시급성이 약화되고 말았다” (Robert Reich, 2010) 절박한 더 큰 난제는 바로 ‘불평등의 심화’였다. 난제의 해결을 미룬 대가는 잠깐의 경제 회복 뒤에 다시 찾아온 위기였고 그 위기는 지금 장기화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인접국가인 중국의 성장세 유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 동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고, 이를 배경으로 가계부채 부실화나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 가능성도 일정하게 지연되는 과정을 밟았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등 부동산 가격 조정이나 가계 채무조정이 지연되면서 뒤늦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위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과도한 가계부채를 막고 사전에 위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재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화 관점에서 볼 때, 사후적인 구제금융이나 채무조정보다 더 나은 것이다.” (Michael Kumhof, 2010)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위기의 예방 차원에서 구조개혁으로 제기된 것이 시장 영역에서는 경제 민주화, 사회 영역에서는 보편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의제가 어떤 문법과 맥락에서 국민의 빠른 호응을 얻고 시대정신으로 까지 부상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하위범주에 ‘원칙이 바로 선 경제’라는 이름아래 경제 민주화 조항 일부를 흡수시킨 것은 경제 민주화가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보다 균형적인 소득 분배는 안정적 성장체제를 위한 핵심적 전제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유럽위기의 지속에 따른 세계경제 장기침체로 수출주도 성장의 엔진마저 식어가는 지금, 한국경제도 여전히 위기의 반경아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노동권 회복은 바로 위기의 예방책이자 안정적 성장의 전제이다.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이를 위해 당장 소득(고용)정책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고용)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 지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노동권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직장 폐쇄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불법적인 파견과 사내하청 금지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노동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는 그 기반 아래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조세정책은 당연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최상위 소득계층과, 특히 우리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수적이며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증세 정책이 복지 재원 조달의 의미와 함께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불평등 환경을 조성한 금융 투기에 대한 규제의 성격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득 불평등 심화 구조를 보다 근원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연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하고, 경제 권력으로 전환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개혁까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정책,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포함한 노동권 보호 정책, 그리고 대기업 증세를 포함한 조세 정책 등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확산된 의제들이다. 문제는 그런 의제들을 어떤 위치와 비중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에 있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해 거시 경제적 의미를 재평가 한다면 그 우선순위도 달라질 것이다. 단순한 민생 현안의 하나가 아니라 경제위기의 예방책으로, 그리고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처럼 성장의 일개 하위 범주로 경제 민주화를 넣어놓고 공약을 지켰노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 [참고 문헌]

-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2010), 『폴트라인( Fault Lines)』
-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2010),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 Shock)』
- 강두용 · 이상호(2012),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산업연구원
- 강신욱(2011), “소득 이동성의 의미와 중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태, 박진호(2013), “가계소득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 성명제(2011), “우리나라 소득 이동성 변화추이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Engelbert Stockhammer(2012), "Rising Inequality as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PERI working paper
- Michael Kumhof and Romain Ranciere(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is", IMF Working Paper.
- Kennickell, Arthur(2009), "Ponds and streams: Wealth and income in the US, 1989 to 2007"

## 2013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3년 2월 28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 소득	1/3	청년일자리 현황과 과제	김수현
2013년 전망	1/6	2013년, 박근혜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김병권
2013년 전망	1/7	2013년, 피할 수 없는 세계경기 장기침체	여경훈
새사연북클럽	1/8	〈새사연 희망 북클럽①〉날아라. 노동	김병권
2013년 전망	1/9	2013년,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수 있나	정태인
새사연북클럽	1/10	〈새사연 희망 북클럽②〉대한민국 부모	최정은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2013년 전망	1/14	2013년, 계속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2013년 전망	1/16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	이수연
새사연북클럽	1/17	〈새사연 희망 북클럽③〉 초협력자	이은경
2013년 전망	1/1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2013년 전망	1/21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김병권
새사연북클럽	1/22	〈새사연 희망 북클럽④〉 현시창	이수민
2013년 전망	1/23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김병권
새사연북클럽	1/24	〈새사연 희망 북클럽⑤〉 시민의 불복종	김수현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김병권
저출산	1/28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최정은
2013년 전망	1/29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진남영
새사연북클럽	1/31	〈새사연 희망 북클럽⑥〉케인스: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가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사회적경제	2/4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백의 사회적 경제	이수연
연금개혁	2/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이은경
새사연북클럽	2/6	〈새사연 희망 북클럽⑦〉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이수연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2013년 전망	2/13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추천 보고서	2/18	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추천 보고서	2/21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김병권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2013년 전망	2/25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이은경
추천 보고서	2/27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이은경